



이번 대선은 진보대열을 만들어 보수진영에 맞서겠다는 노동자계급의 의지를 실현시키는 계기이다. 세상의 변화를 거부하고 언제까지나 이 사회를 지배하려는 사찰과 집단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한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결단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 나라 이 사회의 변화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엄혹한 탄압을 이겨내고 민주노조진영을 굳게 쌓아올렸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국민승리21 출범의 의미

대통령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나라 정치를 지배해 온 정당과 후보들은 서로 청와대 주인이 되겠다고 치고 받고 쫓고 합치고 야단법석을 떨다가 이제는 꺼리 꺼리 손을 잡고 표훈치기에 여념이 없다. 그럴싸한 이유를 들어 자기만이 나라를 살릴수 있다고 열변을 토하고 장미빛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열변과 공약은 노동자들의 처지와는 한참 거

리가 멀다. 힘과 재산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이 변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제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자들과 그 이웃들이 '정치세력화'를 하겠다고 나섰다. 그 첫걸음은 오랜 준비 끝에 1997년 10월 26일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이하 국민승리21로 줄임)이 닛을 올림으로써 시작되었다. 국민승리21은 그 당찬 출발의 뜻을 이렇게 밝혔다.

"지역정치, 봉당정치, 금권정치를 척결

하고 노동자 민중 등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를 구현 하며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개혁과 새로운 정치세력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그날 국민승리 21은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뽑았다. 노동조합들과 활동가들은 지역, 사업장, 부문 마다 이런저런 조직을 만들고 돈도 모아야 한다면서 열심히 뛰고 있다. 신문이나 방송은 이런 사실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국민승리21’은 노동자를 믿고 한표라도 더 얻었다고 꽤 발걸음을 내딛는다. 권영길후보를 비롯한 일꾼들은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는 다짐으로 생기가 넘친다. 하지만 노동자들 속에는 아직도 덩뎁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 현장열기가 미지근한 곳도 있다. 이것은 지금 부닥치고 있는 문제들이 감당하기에 너무도 힘에 겨운 탓일 것이다. 노동자들은 언제 밀려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몰려있다. 재고는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도 숨들릴 사이도 없이 작업독촉이 밀려든다. 몸도 마음도 피곤하기만 하다. 정치니 대통령 선거니 하는 것들은 이 처럼 생존에 쫓기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어찌면 한가로운 얘기일 수도 있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나 ‘국민승리21’은 바로 이러한 현실에서 출발하고 있다. 진흙탕과 같은 낡은 정치의 틀을 깨고 가난과 고통에 멍든 노동자 대중의 가슴에 열정과 희망의 불은 장미꽃을 피우려는 것이다. 그래서 말과 글로만 떠돌아 왔던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주인’으로 나서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 정치세력화 -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정치세력화라는 말은 전에는 그다지 잘 쓰지 않았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나 정치참여라는 말은 있어도 정치세력화라는 말은 드물었다. 정치를 설명하는 교과서에도 똑부러지게 정리해 놓은 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세력화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다. 정치세력화란 과연 무엇인가?

‘정치’가 무엇인지는 말하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그러나 어디를 보아도 정치의 뜻에는 ‘권력’이 빼놓지 않고 들어가 있다. 권력은 남을 지배하는 힘이다. 그런데 이 사회는 여러 가지 계급과 계층으로 짜여져 있고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이다. 정치의 알맹이가 권력이라면 정치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지배하는 쪽과 지배를 받지 않으려는 쪽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정치란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사회에서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거나 지배하기 위해 벌이는 투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권력을 휘두르고 그 권력을 잡기 위한 모든 활동이 바로 정치인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어느 한 두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계급을 복종시키려면 힘을 키워야 하고 이것이 세력화이다. 이렇게 보면 노동자 정치세력화란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힘을 정치적으로 키워가는 것을 말한다. 즉 노동자계급이 자신과 이해를 같이 하는 세력과 함께 뭉쳐 지금보다 덜 지배받기 위해서 나아가서는 지배받는 것으로부터 지배하는 쪽으로 바꾸기 위해 힘을 키워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힘을 키워 가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패거리를 만들고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 이 조직과 투쟁은 더 큰 힘을 만들고 다른 사회계층을 끌어들이는 터전이 된다. 직장, 지역, 산업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전국 조직을 세우는 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여 싸우는 일, 잘못된 제도나 정책에 반대하고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싸우는 일, 선거활동이나 정책연합과 같이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 등등이 그것이다. 이것을 사회적 세력화라 한다. 그러나 노조결성이나 노조의 경제적 투쟁과 집회, 시위, 파업과 같은 대중운동 방식에 의한 활동으로는 의회라는 제도 정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률과 제도의 제정과 개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예컨대 정치적 총파업이

라 하더라도 그 본질적 성격은 방어적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지난 겨울 전국적인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이 개악되고 말았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여기서 노동자들은 권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스스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방도

를 찾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 방도는 권력을 상대로 하여 정치적 투쟁을 벌이고 정당을 건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당이란 계급의 이익을 대표하고 계급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 계급중의 선진적 부분이 결집한 정치조직이다. 정당은 계급투쟁의 선두에 서서 싸우고 계급은 정당에

의해 자신의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깨닫고 정치적으로 조직되고 강화된다. 노동자정당은 노동자계급이 조직하고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며 노동자계급을 지도하는 정당이다. 노동자정당은 자본주의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전략적 목표로 세우고 총자본과 그를 대표하는 정당 그리고 국가 권력을 투쟁대상으로 삼는다. 노동자정당을 노동자계급 조직의 최고형태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첫 관문 - 대통령선거

민주노총은 1997년 3월 열린 대의원 대

**결국 정치란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사회에서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거나  
지배하기 위해 벌이는 투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권력을 휘두르고 그 권력을 잡기 위한  
모든 활동이 바로 정치인 것이다.**

회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대중적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자가 적극 참여하고 각계 각층의 민주적이고 양심적인 세력과 함께 하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실현하고 노동자의 이익과 요구를 철저히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 건설의 토대를 구축한다.' 이 방침에 따라 민주노총은 98년 지자체선거 대거 진출, 98-99년 정당 건설, 2000년 국회 원내 진출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민족민주운동의 투쟁 구심이자 정치적 대표체'로 자처하는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전국연합)'은 1987년 2월에 열린 대의원 대회에서 "민족민주운동 세력의 힘을 결집시켜 민주개혁과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책임있는 정치세력으로 거듭나고자 민족민주 진영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결정했다.

민주노총과 전국연합의 이런 결정은 다른 민주 민중단체들의 지지와 결합하여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 21'의 결성으로 나타났다. 국민승리21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로 나아가기 위한 그루티기이다. 국민승리21은 눈앞에 닥친 대통령선거를 정치세력화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대통령 후보로 뽑았다. 그 이유는 후보를 냈을 때 선거를 정치세력화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대통령선거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국민승리21의 출범과 대통령선거에의 참여는 노동자 대중이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시도이다. 그 동안 노동자들은 통치의 대상이었다. 노동자들은 단지 선거 때 한표를 행사하는 유권자에 지나지 않았다. 노동자의 정치활동은 남북분단과 노동자의 정치적 이용이라는 명분으로 금지되었고 국민으로서의 민주적 권리행사와 생존을 위한 절박한 요구와 투쟁은 지배권력이 만든 법률과 제도에 의해 번번히 차단 당하였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은 정치꾼들이 벌이는 권력쟁탈전의 구경꾼이었다. 정치꾼들의 패싸움에 휘말려 지역으로 갈리고 학연으로 갈려서로 고민하고 다부었다. 그러는 사이에 정치꾼들은 이런 저런 구호를 내세워 노동자들을 유혹하여 자기 편에 세우면서도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에는 결눈질도 하지 않았다. 경제가 나빠진 것도 사회불안이 심해진 것도 모두 노동자 책임이라고 몰아부쳤다. 노동자들에게 붙여졌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거나 산업역군이라는 찬사는 사라진지 오래다.

이제 노동자들은 이런 정치를 거부하려는 것이다. 통치의 대상에서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은 정치세력화를 선언이나 강령의 한 항목으로 묻어두지 않고 구체적인 이정표를 세우고 조직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정치세력화를 향한 대장정의 첫발로 대선에 독자후보를 내보낼 것이다.

이번 대선은 진보대열을 만들어 보수진

영에 맞서겠다는 노동자계급의 의지를 실현시키는 계기이다. 세상의 변화를 거부하고 언제까지나 이 사회를 지배하려는 사람과 집단에 대하여 싸우기 위한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결단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 나라 이 사회의 변화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엄혹한 탄압을 이겨내고 민주노조진영을 굳게 뭉아올렸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노동자 대중은 오랜 동안 민주화를 위해 싸워왔다. 그 싸움은 민주 대 반민주, 군사독재에 대한 민주화의 쟁취로 집약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배와 피지배의 구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정치는 여전히 가진 자들의 각축장이고 민초들이 끼어들 여지는 어디에도 열려있지 않았다. 피땀 어린 투쟁으로 쟁취한 민주화는 가진 자를 위한 독단적인 정치를 합리화하는데 이용될 뿐이었다.

이제 노동자들은 이런 보수정치, 두목정치, 자본편에 선 정치, 지역민중을 편싸움시키는 정치판을 깨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수 민중이 참여하는 정치,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착취를 청산하는 정치, 사회체제의 낡은 틀을 바꾸는 정치, 사회정의와 도덕성을 확립하고 평화를 옹호하는 정치를 향해 나아가려는 것이다. 이번 대선은 이런 낡은 정치판에 맞서 새로운 변화를 일구기 위해 진보진영의 성을 쌓는 초석이다.

‘국민승리 21’은 이번 대선을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쓰고 있다. 지난날의 무수한 단절과 깊은 좌절 그리고 참담한 실패와 회생의 경험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를 중심으로 정치세력화를 이루려는 시도는 여러번 이어져 왔다. 1920년대 일제하에서 활발해진 노동운동을 기반으로 무산대중 중심의 정당을 만들려했고 1930년대에는 일제의 극심한 탄압 아래 사회주의 그룹과 결합하여 많은 비밀단체를 만들어 싸우기도 하였다. 해방후 미군정시기에는 노동조합운동과 정당이 정치동맹을 맺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1950년대 한국전쟁후에는 혁신정당을 표방한 진보당이 결성되었다. 1960년 4월 혁명후에는 여러 갈래의 혁신정당과 민족자주통일협의회를 중심으로 민족통일전선체 성격을 가진 조직이 결성되었으며 60년대 이후에도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적 노력이 비공개로 끈질기게 이어졌다.

또한 80년대 초중반에는 노동자 정치조직이 모색되었고 92년 대선에서는 민중후보를 내보내고 민중당을 결성하여 총선에 임하기도 하였다. 이런 노력들은 일제와 독재권력의 무단적인 탄압, 분단상황과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위압과 같은 바깥조건 때문에 그 때마다 좌절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회생 당하였다.

그러나 이런 바깥의 억압을 물리치고 정치적 세력화를 이룰 수 없었던 데는 대중적인 밀반침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지식인 중심의 소시민 계층이 주도한 정치세력화는 시작에 그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 국민승리21은 이런

역사적인 뼈저린 실패의 경험을 딛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 1987년 노동항쟁 이후 크게 성장한 노동조합운동과 민족 민주 진영이 조직적 결정을 통해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국민승리21의 출범과 대통령선거는 정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의식을 높이기 될 것이다. 지금까지 노동자 대중은 정치를 정치꾼들의 싸움판으로 생각했다. 투표는 노동자 전체의 이익이나 권리와는 상관이 없었다. 후보자를 고르는 기준은 개인적인 인연이나 지역적인 연고, 학연이 중심을 이루었다. 전라도의 '한'과 경상도의 '우리가 남이가'와 충청도의 '헛바지'라는 선동에 휩쓸려 들어갔다. 공약이나 정책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에도 개인적인 판단에 따를 뿐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노동자들은 더 이상 표만 찍는 기계로 남을 수 없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정치조직과 자신의 후보를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정책을 내놓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정권교체나 세대교체, 3김청산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아니면 선거에 대한 과거의 관성에 따라 보수정당의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노동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과 행동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곧 알게 될 것이다.

대선 이후의 정치판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자들은 정치와 정치세력화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할 수 밖에 없고 정치

세력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 움직임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판단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결정되고 추진됨으로써 더욱 확실한 인식으로 발전하고 힘있는 실천으로 나타날 것이다.

노동자들이 정치세력화를 향해 가는 길목에는 여러가지 제도적인 억압의 틀이 버티고 서 있다. 이 나라 정치는 오랜 동안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켜 왔고 지금도 근본적으로는 달라진게 없다. 지난번 노동법 개정으로 노동법상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삭제 되었지만 현행 선거법은 여전히 노동조합의 선거참가를 금지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특정한 후보를 지지할 수도 없고 선거자금을 건거나 낼 수도 없다.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때 권영길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다고 해서 검찰이 연설한 간부들을 조사하겠다고 나온 것이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 선거법은 기존의 정당에게만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노동조합을 비롯한 단체들이 정치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반 민주적인 악법의 표본이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정치실천단을 조직하고 돈도 모으게 될 것이다. 권력은 법을 내세워 이를 막으려 할 것이고 처벌하려 할 것이다. 만일 노동조합 모두가 선거활동에 나서고 돈을 모아 낸다면 '범법자'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엄청난 수의 범법자를 만들어 낸 법이 민주적인 법일 수는 없다. 이번 대선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가로막고 있는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대선은, 노동자정당이 어떤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는가에 대해 국민전체에게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내용은 완전한 것은 아니겠지만 대선에서의 공약을 통해 기본적인 방향은 제시될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국민승리21이 결성선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지향할 것이다. 나아가 당연한 제도 정책의 개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혁의 목표까지 포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정치 경

제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을 이루고 이를 통해 실질적 민주화를 이루지 않으면 기성 보수정당과 아무런 차별성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자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번 대선은 정치세력화가 지향하는 이념적 목표와 그 정당성을 올바르게 세우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민주총과 민족민주진영은 정치세력화를 향한 첫걸음으로 대통령후보전술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각 조직별로 여러가지 조직적 활동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조직들은 사업장, 지역, 부문별로 여러가지 선거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는 '국민

후보'의 득표율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국민후보'의 득표율은 앞으로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지도가 높게 나온다면 노동자들에게 정치세력화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국민대중에게 새로운 사회에 대한 변화가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노동운동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키게 될 것이다.

만일 지지도가 낮게 나올 경우 노동자 스스로 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줘 앞으로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데 많은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조직은 이번 대선에서 각급 조직이 결정한

바에 따라 국민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그동안 쌓아온 조직적 역량을 점검하고 확인하게 될 것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지지와 신뢰가 어느 정도인가, 기업별노조의 벽이 얼마나 높으며 지역별 단절이 얼마나 깊은가를 보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도를 찾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적 훈련의 장만이 아니라 현장조직력을 새로이 키워내고 기업별노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산별노조 건설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선은 이후 정치세력화의 성패를

**세상은 변화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온 힘을 다하면  
세상은 더 빨리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 이유는 이후의 정치일정이 모두 대선의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이다. 우선 98년도에 치루어질 지방자치단체 선거만 해도 5천여개 선거구에 2만여명이 출마하는 선거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 지자체 선거에 진출할 주체를 형성하고 사업장, 지역, 부문 마다 조직적 기반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얻어진 조직적 성과는 2000년 총선거에서 의회 내에 교두보를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대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다.

## 시작이 반이다

어떤 노동자든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노동자들 사이에는 대통령선거에 대해 여러가지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직 때가 이르다든가 먼저 정권부터 바꾸어 놓고 보자는 주장도 있고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통령후보로 나선데 대해 불만을 가진 노동자도 있다. 또한 올해 임단투가 늦어져 준비를 서두르는 틈에 노동자들 사이에 논의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다. 거기다가 선거법상의 제약이나 언론의 외면, 선거자금의 부족 때문에 선거활동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대통령선거를 포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대통령선거는 정치세력화를 향

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시작이 반,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옛말은 지금 이 시점에서 노동자들이 결단을 내리는데 가장 적합한 경우이다.

이번 대선 만이 아니라 앞으로 정치세력화를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크고 작은 많은 벽을 뛰어 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선거 결과가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거기에 지나치게 연연하는 것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데 있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잘되었으면 잘된대로, 못되었으면 못된대로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세워 다음 단계를 향해 실천해 가면 되는 것이다. 제도상의 제약은 대중투쟁을 통해 깨뜨려 나가야 하고 안으로는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더한층 높여내면서 정치일꾼들을 집중적으로 키워내야 한다. 다른 민중운동과 진보적 정치세력 그리고 다양한 시민운동과 동맹을 맺고 연대를 튼튼히 하는 것, 국민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것, 노동운동의 통일을 이루어 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세상은 변화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온 힘을 다하면 세상은 더 빨리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자는 스스로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계기이다. ❖